

공적부조의 사회적 기능과 윤리적 딜레마

2209014 선우호연 | 2318032 서다은 | 2318054 임수빈

목 차

서 론

공적부조의 의미 및 목적
공적부조의 종류
기본원리

본 론

사회적 기능
급여체계
지원영역
윤리적 딜레마 종류
부정행위 발생 시 입장차이
분배의 정의 및 필요성
영상시청

결 론

윤리적 딜레마 사례 토론

공공부조(공적부조) 의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공공부조(공적부조) 목적

사회복지 역사에서 볼 때 경찰국가적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목적 아래 시행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자신의 능력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어려움이 있으며,
경제적 곤중에 처한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공공부조(공적부조) 종류

의료급여제도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의료문제를 지원,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장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 제공,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 자활지원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지급

기본원리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국가가 생활이 곤궁한 국민에 대하여
곤궁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장을
행하여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원리

국가는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로 생활보호제도를
만들었고 이의 실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생존권의 보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저한의
생활보장, 즉 최저한도의 수요가
충족되는 정도의 생활보장을 모든
국민이 똑같이 누리게 하자는 원리

기본원리

4. 무차별평등의 원리

모든 국민이 생활상 직면하게 된 빈곤에 즉응하여 포괄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생존권 이념에 입각해 국기법상 법률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요보호상태에 빠지게 된 곤궁의 요인이 무엇이든지, 인종, 신조, 성별 및 사회적 신분을 불문하고 법의 적용상 차별적인 취급을 받음이 없이 무차별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리

5. 보충성의 원리

국기법에 의한 급여의 방법을 규정한 조항, 국기법에 의한 급여가 급여를 받아야 할 자가 자기의 생활유지를 위해 개인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한도의 생활유지가 어려운 경우 최종적으로 국가가 개입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주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리

6. 자립조장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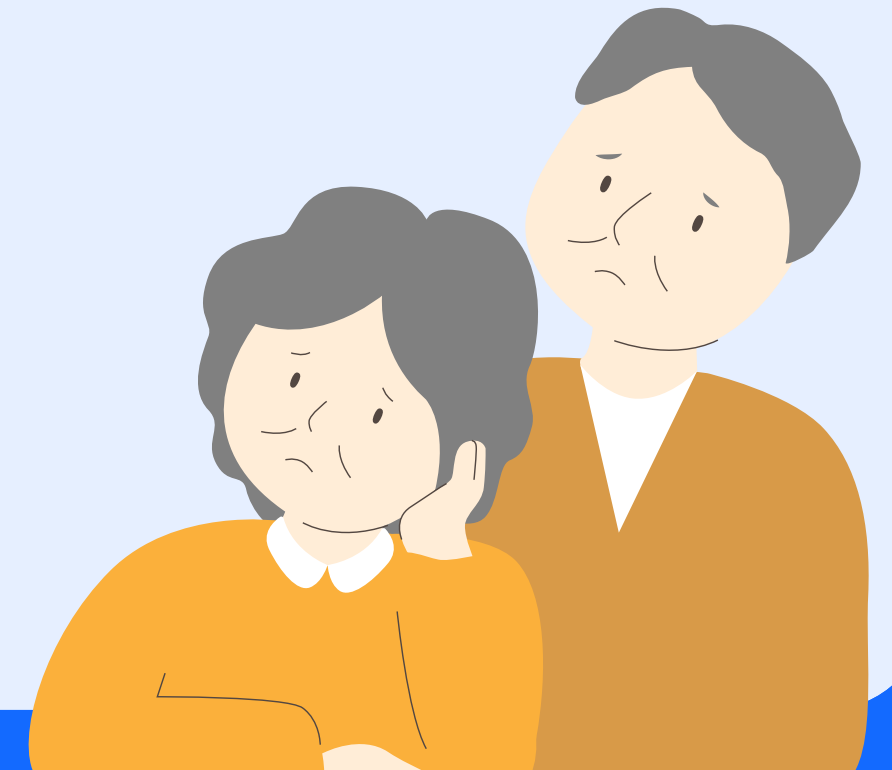
국기법은 수급자로 하여금 그에게 내재하고 있는 가능성을 끌어내어 육성함으로써 수급자가 독자적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대상자가 경제생활의 면에 있어 부조를 받지 않고도 자력으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

공공부조(공적부조) 사회적 기능

공공부조는 사회 보험으로서는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부상, 사망, 출산과 양육 등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보장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



급여체계

2015년부터 통합 급여체계에서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개별 급여체계로 전환되어 급여의 유형마다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급여가 실시

생계급여는 모든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나, 그 밖의 급여는 수급권자의 필요에 따라 선별적 지급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며,
장제급여는 그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

지원영역

- 1. 생계지원 영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비 지원)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현물 지원
- 2. 의료지원 영역 :**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의료지원 질병·부상 시 필요한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
- 3. 주거지원 영역 :**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거주환경 제공
- 4. 교육지원 영역 :** 교육급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보조 저소득층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5. 자립지원 영역 :** 자활급여, 자활근로사업, 직업훈련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돕는 지원

의료부조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발생하는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부조 제도

대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본인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

법적 근거

(「의료급여법」 제1조)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급여를 실시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

의료급여 수급자는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매우 적거나 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

지원 항목

입원 및 외래진료비 / 수술비, 검사비, 치료재료비, 약제비 / 건강검진, 재활치료, 정신건강 진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 지원

윤리적 딜레마

1. 수급권과 낙인 사이의 딜레마

공적부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서 지원하며, 이 과정에서
수급자가 국가의 시혜를 받는 존재로
낙인 찍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ex) 기초생활수급자가 복지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이나 차
별을 겪는 상황

2. 형평성과 공평성의 딜레마

제한된 예산으로 누구에게,
얼마만큼 지원할지 결정해야 함

ex) 비슷한 소득 수준의 두 가구 중 한
쪽은 부양가족이 많고, 한쪽은 적을 때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 것인지

3. 국가책임 개인책임의 딜레마

빈곤을 해결하는 데 국가의 역할이
우선인가, 개인의 노력 책임이
우선인가에 대한 갈등

ex)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
노력을 보이지 않을 때 지원을 계속해
야 하는가?

윤리적 딜레마

4. 부정수급 관리와 인권보호의 딜레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지만,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ex) 가정방문이나 통장조회 등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

5. 복지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정의의 딜레마

공적부조 재정은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과도한 지출은 미래세대의
부담이 됨

ex) 경기침체로 재정이 부족할 때,
복지 예산을 줄여야 하는가
유지해야 하는가?

공적부조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정수급을 발견했을 때 법적 의무에 따라 신고해야 할지 /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이해하고 보호해야 할지

신고해야 한다는 입장

- 부정수급은 제도의 신뢰를 해치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함.
- 사회복지사는 공공재정 누수를 막고,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함.
- 사회복지사는 "사회 정의"와 "공익" 실현을 위한 책임이 있음.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

- 일부 부정수급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음.
- 즉각적인 신고는 클라이언트와의 라포를 깨뜨리고, 장기적인 지원관계를 해칠 수 있음.
- 제도 사각지대나 과도한 자격기준 때문에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

분배의 정의 및 필요성

사회가 생산한 자원·소득·기회 등의 기본적 재화가 어떤 원칙에 따라 각 구성원에게 배분되는지를 결정하는 사회적 과정이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서비스 등을 어떤 기준에 따라 제공할지 결정하는 원리

1. **사회적 불평등 완화** : 시장만 존재할 경우 소득과 기회의 불균형이 확대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 필요

2. **사회통합 유지** : 지나친 격차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 적절한 분배는 사회 안정성과 신뢰 유지에 기여

3. **기본적 생활 보장** : 사회적 약자는 시장에서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분배를 통해 최소한의 삶을 유지

4. **기회의 평등 확보** : 빈곤한 가정의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이 출발선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

분배의 기준

필요 (마르크스) : 자원이 필요한 정도, 필요(욕구)가 더 큰 사람에게 더 많이 배분

형평성 (아리스토텔레스) : 기여도, 능력 등 불평등한 요소를 고려한 비례적 분배
공평한 분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것

평등 (평등 원칙) :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동등하게 분배

최소극대화 (롤스-차등의 원칙) : 최약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분배, 사회적 불평등이 있어도 불평등 때문에 가장 가난한 사람의 삶이 나아진다면 그 불평등은 정당함

효율성, 효용성 (공리주의) : 분배는 사회 전체 효용을 가장 크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한국의 공적부조 정책의 분배 기준은?

1. 마르크스의 필요 원칙

- 공적부조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급여를 제공함
- 선정 기준도 가구 소득,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지를 중심으로 평가함

ex) 국기법의 소득인정액 기준

2. 롤스의 차등의 원칙 (최소극대화)

- 한국의 공적부조는 최저생활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히 2021년 부양의무제 폐지는 더 많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비온뒤 특별기획

아들은 정말 아버지를 죽였나

청년 간병인 강도영의 비극

그런 제가-

아버지를 그리워

해도 될까요?



with.

Sherlock

박상규 기자



윤리적 딜레마 사례

박씨는 78세의 노모와 함께 살고 있다. 노모는 2년 전부터 중증 치매 판정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상태이며, 박씨는 어머니의 간병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박씨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고 있었으나, 최근 몇 달간 어머니의 돌발 행동과 방치 위험이 커지면서 추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문제는 해당 지역의 노인돌봄 서비스 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미 대기자만 수십 명이었고, 모두가 심각한 돌봄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 박씨는 즉각적인 서비스 투입을 요청했지만, 같은 시기에 독거 치매노인 응급위기 가구가 두 곳이나 추가로 접수되며 담당 사회복지사는 누구에게 먼저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했다.

팀 내부 회의에서는 "보편적 돌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 상황에서는 생명 위험이 가장 큰 가구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박씨는 억울함을 표현했고, 사회복지사는 제한된 자원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현실에 큰 부담감을 느꼈다.